

[보도자료]

산재보험제도 개악반대 및 산재노동자 고통중언 민주노총 기자회견

1. 취지

- 산재보험법과 산안법의 개악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 개악되고 있는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공유한다.
- 산업재해로 신음하고 있는 산재피해노동자의 고통을 대중적으로 확인하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 산하 '산재보험발전위원회'의 논의를 중단하고, 민주노총의 참여와 산재피해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논의 구조 구성을 촉구한다.

2. 경과

노동부의 산재보험제도 개악 추진과정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통하여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이미 2006년에 발의한 상태이며, 노동부에게도 산재보험 제도개혁을 위한 논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누누이 요구하였다. 그리고 산재환자들까지 포함시켜 이번에는말로 산재보험을 제대로 개혁하자고 요구하였다. 올해 4월 노동부는 우리의 요구에 밀려 산재보험제도개선협의회 설치를 합의하였으나, 한 달 만에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산재보험제도개악을 추진중이다. 노사정위원회는 산재환자의 참관도 거부하였으며, 재가진폐환자의 문제, 선치료 후정산의 문제, 심사평가원독립의 문제, 원직장 복귀의 문제 등 중요한 의제를 모두 삭제한 채 노동부에서 개악하려는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급속도로 진행중이다.

- ▷ 2004년 - 2005년 노동부 주관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 운영
- ▷ 2005년 8월 25일 민주노동당에서 산재보험법 개정안 입법 발의
- ▷ 2005년 11월 노동부 주관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 연구결과 발표
- ▷ 2006년 1월 19일 민주노총/민주노동당 산재보험 포럼 개최
- ▷ 2006년 4월 5일 노동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등이 참여하는 산재보험제도개선협의회 설치 합의
- ▷ 2006년 5월 4일 노사정위원회 제39차 본회의에서 산재보험논의 노사정위원회로 이관 결정
- ▷ 2006년 6월부터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발전위원회 운영하면서 제도개선 의제 결정, 민주노총이 요구해오던 의제는 모두 제외
- ▷ 2006년 6월 원진산업재해자협회에서 노사정위원회 참관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함

3. 기자회견문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심각성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처음으로 세계10위권에 진입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렇게 경제발전의 중심역할을 한 노동자의 몸이 부서지고, 골병들고, 과로로 인하여 현장에서 쓰러지고 있는 참혹한 현실은 애써 외면했다.

ILO가 2004년 각 국의 산재발생 수, 노동안전보건 관련 예산, 법제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노동안전보건지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동유럽, 중앙아시아 국가보다 못한 47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이를 잘 증거하고 있다.

국내 통계보고를 보더라도 산업재해로 인하여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으며, 100명의 노동자가 신체 장애인이 되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 특히 노동자의 생명을 금전으로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굳이 정부 통계를 빌리면 2005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액이 무려 15조 2,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노동현장을 만드는 것이 경제규모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노동자의 건강은 정부의 의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정부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노동자의 건강은 강화될 수도 아니면 심각한 위기에 놓일 수도 있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개악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노동부와 산업자원부의 공동용역에 의거 연구되어 지난 2005년 11월 제출된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의 타당성 분석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규제완화에 의해 노동자의 건강권이 파괴되고 근무조건과 환경의 후퇴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출하고 있다. 1997년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폐기 또는 완화 된 최소한의 안전보건관련 법률들이 휴지조각이 되어 버리면서 산업재해가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을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입증한 것이다.

“규제완화” = “경제발전”이라는 괴변이 노동자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당국이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폐지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나, 이제 겨우 시행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도 폐지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 등은 정부정책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반 노동자적인 개악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의 개악 추진도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민주노총의 참여를 보장하고 산재피해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산재법도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산업재해로 치료받기가 어려우며, 보장성이 너무 낮아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직장 복귀율이 40%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 재활사업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재활관련 한 규정은 전혀 없다.

또한 산재법의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진폐법은 그 환자의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지만, 수만명에 이르는 재가진폐환자들은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

현실이 이렇게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산재법의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산재보험재정을 이유로 보험급여를 축소하려고 하는 등 사회보험의 취지에 역행하는 개악을 추진하려 하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과 산재피해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하여 산안법 . 산재법의 개악저지와 노

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며, 7월 5일 대중적 투쟁을 통하여 가열찬 투쟁의지를 선포할 것이다.

4. 산재피해 노동자의 증언

1) 재가 진폐노동자의 증언

최근 정부는 보험재정의 문제를 내세워 산재보험법을 개정하기 위한 준비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환영할 일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장기간의 요양과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진폐환자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전국 진폐환자들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는 산재보험재정이 어렵다며 보험급여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5년 안에 보험재정이 바닥난다고 일부 신문들은 호들갑을 떨면서 정부의 입장을 두둔해 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렵고 힘든 노동환경 하에서 묵묵히 일해 온 많은 노동자들에게 그나마의 사회안전망인 산재보험의 혜택을 줄인다면 다치고 병든 노동자들에게는 희망을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단순히 경제논리에 앞서서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건강한 노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재활시키고 복귀시키는 마지막 생명장치입니다.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보험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외면한 채 단순히 기업들의 논리와 경제관료들의 입장에 우선하여 산재보험의 사회적 순기능을 역행시킨다면 이는 반노동자적 정책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치료와 의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진폐환자들에게는 이 같은 산재보험의 개악은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 이들이 장기간 요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이들이 그토록 요양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지 정부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않은 채 보험재정의 어려움만을 내세워 보험혜택을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개악을 하겠다니 정부의 처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진폐환자들은 아직도 수 만 명이 직업병으로 인정도 받지 못한 채 재가진폐환자로 남아 있습니다. 말이 좋아 재가진폐환자이지 사실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의 특별법인 진폐법에서 정한 9가지 합병증에 들지 못하면 호흡곤란을 심하게 겪고 있는 진폐환자들은 요양이나 의료서비스 한번 받아볼 수 없습니다.

아파도 자기 돈으로 약을 사먹어야 합니다. 병원에 가도 자기 돈으로 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그나마의 의료적 혜택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진폐환자가 되었습니까? 지난 날 급격한 경제성장을 위해 산업의 원동력인 석탄을 캐내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학교도 보내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일해 왔던 노동환경이 건강한 노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 산업 대비 사망재해를 최고, 제조업 대비 10배의 노동강도와 지하막장에서 일하는 특수한 환경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오로지 증산과 이윤극대화를 위해 내몰린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직업병 환자들이 전 산업 대비 가장 많고 진폐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직업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병상에는 3천명이 코에 호스를 꽂고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 열배나 되는 3만여명의 재가진폐환자들은 입원요양은커녕 법이 정한 합병증이 없다는 이유로 진폐증에 걸려도 직업병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4~5만에 이르는 퇴직 탄광노동자들에게서 새로운 진폐증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대책은 세우지도 않은 채 재정부족으로 산재보험의 혜택마저 줄이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따라서 진폐환자들은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우리 모두의 합의와 동의가 없는 산재보험법 개정 중지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이 전국의 재가진폐환자들의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합병증의 범위에 폐렴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진폐환자들에게는 단순한 감기도 폐렴으로 가고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폐렴을 합병증에 포함시켜 단기간이라도 요양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둘째, 재가환자들에게 많은 13급 환자들에게도 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료카드로 약복용자(3개월마다 약수령)에게는 통원 요양 환자로 간주하여 산재보험법에 의거 요양을 모두 시켜주던지 아니면 휴업급여를 일정하게 지급하여 생계유지와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진폐판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진폐증을 판정하는 과정이 아직 공정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많은 재가환자들이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진단장비의 개선, 진단방식의 개선과 판정을 담당하는 의료진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넷째, 진폐환자들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아직도 정부는 단 한번의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급히 재가환자들의 실태를 조사하여 정책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법의 개악을 강력히 반대하며 좀 더 많은 노동자들이 재해를 당했을 때 안심하고 치료와 요양을 받고 재활하여 노동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는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2006년 7월 일
사단법인 한국재가진폐협회

2) 원진레이온 산재피해자의 증언

5. 질의 및 응답

6. 참고자료

1) 7월 5일 투쟁선포식 일정

- 제목: “산안법 . 산재법 개악저지와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투쟁 선포식!”
- 일시 및 장소: 7월 5일 14시 30분 여의도 국회(산업은행 앞)
- 주최: 민주노총
- 참가단위: 민주노총, 안전보건단체, 산재피해단체 등 노동자 건강권과 관련한 전 조직.
- 집회 일정(14시 45분부터~)
- * 민중의례
- * 대회사: 김지희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 * 연대사: 민주노동당(단병호 의원)
- * 연대사: 재가진폐협회
- * 문예공연: 문화패-들꽃
- * 투쟁사1: 노동안전보건위원 - 금속
- * 투쟁사2: 원진산업재해자협회
- * 투쟁결의문 낭독: 노동안전보건위원 - 화섬
- 결의문 낭독 후 노사정위원회 행진
- * 노사정위원회 앞 투쟁사 -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 * 노사정위원회 항의 및 촉구서한 전달식
- * 결의의 시간: 손도장 찍기
- * 상징의식: 산재보험개악!, 노동자건강 파괴! 얼음탑 허물기

2) 정부가 추진 중인 산재법 개악(안)의 핵심 내용

① 휴업급여 2년만 지급 - 그 후 장해급여

(내용)

- 휴업급여는 단기성 급여로서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최고 2년으로 제한을 하도록 함.
- 임시장해연금은 요양개시 이후 2년이 경과하여도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을 경우 그 시점을 토대로 하여 장해판정을 하여 임시장해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
- 영구장해연금은 임시장해연금 수급자의 상병상태가 치유되고 증상이 고정되는 시점에서 새로이 판정한 장해등급에 기초하여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함.

(평가)

휴업급여는 업무상 상에 의거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요양기간동안 지급하는 급여임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산재보험기금’의 안정을 이유로 무리한 법해석을 하여 보험급여를 강제로 축소하려고하는 것임.

② 장해연금을 감액. 수준은 55세를 기준으로 65세까지 50% 수준

(내용)

- 장해연금을 노령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급여수준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함. 소득이 하향선으로 전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연령별로 급여수준을 하향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감액수준은 55세를 기준으로 65세까지 50% 수준이며 경과조치를 둠.
- 동시에 전체 연령대에 임금슬라이드제를 둠.

(평가)

- “세계 어느 국가 산재보험체계에서 보상을 줄여, 보험재정을 안정화하는 국가는 없을 것임.”

③ 개별실적요율제 확대

(내용)

-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장이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 적용사업장 범위를 20인 또는 10인 이상으로 확대.

(평가)

- 개별 실적 요율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산재가 감소되지 않음. 즉 보험료 몇 푼 올린다고 해서 사업주가 환경개선을 할 것이라는 판단은 무리가 있음.
- 사업주가 환경개선을 하는 이유는 크게 생산성의 증가, 고용의 안정 등에 기인됨.
- 개별실적 요율제 도입은 현재도 만연되고 있는 산재의 은폐기전으로 작용될 수 있음.
- 특히 산재 발생이 높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우 개별실적 요율제 도입은 산재은폐를 확대시키는 기전으로 작용될 것임.

3) 산재법의 개혁방향

① 전면적용 :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라

- 학습지교사는 과로사로 죽고, 레미콘 기사는 차위에서 떨어져 다치고,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공에 맞아 다치고, 간병인은 허리아파 골병든다. 특수고용직노동자 산재인정으로 노동자 설움 씻어주어야 한다.

- 사업주들의 탐욕 때문에 사장이 되어버린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동자성은 노동부에서 보장해주어야 한다.
- 특수고용직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재적용으로 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노동자성을 인정할 근거를 제공하라

② 선치료후정산 : 산재보험을 모르는 노동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라

- 중소기업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근골격계 직업병” 들어본 적도 없다. 발암물질을 써도 발암물질인지 모른다. 아프면 내 탓일 뿐이다.
- 노동자가 잘 몰라 손해보는 나라는 복지국가가 절대로 될 수 없다. 산재직업병 잘 아는 병원 의사들이 산재신청할 수 있는 제도 만들자.
- 사회양극화로 더욱 살기 어려운 돈없는 노동자 보호할 수 있는 사회보험이 되려면 쉽게 산재신청해주고 치료먼저 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 MRI 찍을 돈 없어서 산재신청 못하는 노동자에게 먼저 치료보장하고 나중에 정산해라. 산재판정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돈주고, 산재불승인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부담 후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능력에 따라 분할납부하도록 하면 된다.

③ 산재심사평가원독립 : 산재심사를 투명하게 하도록 심사평가원 독립하라

- 돈 걷는 곳에서 돈 쓰는 것 감시하는 기구는 말도 안된다.
- 노동자의 주머니에서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감시하고, 산재보험이 노동자를 위해 무엇을 더 노력해야 할지 제시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 산재심평원 독립
- 강제요양종결, 산재불승인 남발은 근로복지공단이 자기 입맛에 맞는 자문의들로 회의를 구성하여 폭력을 휘두르기 때문 : 자문의 제도 철폐하고 산재심평원 독립
- 산재심평원 운영은 노사 당사자가 참여하는 속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자

④ 원직복직 : 원직복직을 최우선으로 재활시스템을 구축하라

- 산재보험 시스템의 최고 목적은 ? 산재를 당한 노동자를 산재 이전의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이다. 몸도 복구, 일자리도 복구. 이것이 산재보험의 최고 목표이다.
- 따라서 원직복직을 법으로 정해놓고 의무화하는 나라가 있는 것이다.
- 우리나라도 산재보험법상 원직복직이 1차 의무, 노동력 상실로 원직복직 못할 경우 같은 회사내 다른 자리로 복직이 2차 선택, 그것도 힘들 경우 산재보험이 책임지고 직업능력 훈련시켜 새로운 직장 보장
- 중소기업세비정규 노동자는 큰 산재당하면 다시는 취업 못하는 상황, 이제는 그만.
- 다쳐도 먹고살 수 있는 나라 만들자.

⑤ 보장성강화 : 충분한 요양보장, 생계보장으로 맘 놓고 치료받도록 하라

- 산재치료 받으면서 생계가 곤란해진다. 치료비 제대로 부담해라.
- 산재치료 받으면 밥을 굶어야 한다. 휴업급여 하한선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라.
- 재활급여, 심리상담 등을 급여로 편성하여 산재노동자가 아낌없이 치료받도록 하라.